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에의 함의
| 한독사회학회 엮음 |
한울 아카데미 1312
German Unification and Power Elites in the East Germany
Lessons for the Korean Unification
| 한독사회학회 엮음 |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에의
함의
한울
아카데미

Oliver Kloss:

Die Behandlung der ostdeutschen Machteliten im Zuge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Koreanisch]

In: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ür Soziologie (Hrsg.):

Ostdeutsche Machteliten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 Lehren für Korea./ German Unification and Power Elites in the East Germany - Lessons for the Korean Unification.

Mit Beiträgen

von

Seung Hyeob Lee

Jong Hee Lee

Tae Guk Jeon

Oliver Kloss

Jan Wielgohs

Michael Hofmann

Markus Pohlmann

Seoul (Republik Korea) ◆ Hanul Books ◆ 2011

ISBN 978-89-460-5312-0

Seiten 15 – 56

한울아카데미 1312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에의 함의

지은이 | 이승협·이종희·전태국·안 빌고스·올리버 클로스·마르쿠스 폴만·
미하엘 호프만
엮은이 | 한독사회학회
펴낸이 | 김종수
펴낸곳 | 도서출판 한울

편집책임 | 박록희
편집 | 박근홍

초판 1쇄 인쇄 | 2011년 3월 28일
초판 1쇄 발행 | 2011년 4월 25일

주소 | 413-756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7 302(본사)
121-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90 서울빌딩 1층(서울 사무소)
전화 | 영업 02-326-0095, 편집 031-955-0606(본사), 02-336-6183(서울 사무소)
팩스 | 02-333-7543
홈페이지 | www.hanulbooks.co.kr
등록 | 1980년 3월 13일, 제406-2003-051호

Printed in Korea.
ISBN 978-89-460-5312-0 93340 (양장)
ISBN 978-89-460-4372-5 93340 (반양장)

* 책값은 겉표지에 있습니다.

차례

부록: 통일 관련 자료

제1장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권력 엘리트의 처신*

올리버 클로스(라이프치히 대학교)

차명제(동국대학교) 옮김

어떤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이 우연히 태어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 의미는 명확하다. '이 나라는 나쁘고, 너무도 나쁘게 통치되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금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1)]

- 볼테르(Voltaire, 1694~1778)

예술가가 시계를 수리해야 한다면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놔둘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현재 시계는 시계가 작동할 때 수리되어야 한다. 즉, 시계가 작동하는 동안 톱니바퀴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Schiller, 1759~1805)

---

* 2009년 9월 18일 서울에서 발표된 원고의 수정작업에 도움을 준 Corinna Schubert 석사(Leipzig)와 사학자 Rainer Müller(Leipzig) 및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 Voltaire, "Gleichheit", *Abbé Beichtkind Cartesianer, Philosophisches Wörterbuch*(Reclam, 1988), S. 173.

2) Friedrich Schiller,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Dritter Brief", *Über Kunst und Wirklichkeit. Schriften und Briefe zur Ästhetik*(Reclam, 1985), S. 23.

1. 공산주의에서의 권력 엘리트: 반동적인 '혁명가'로서 공산주의 국가계급

2010년은 독일에서 일어난 세 번의 평화적 혁명을 기억하는 해이다.[3] 1848~1849년 유럽의 자유주의 혁명, 1918~1919년의 사회민주주의-공화주의 혁명, 마지막으로 1989년의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해체하는 데 이바지했다.[4]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국가들의 선전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DDR)'[5]은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이로써 당대와의 연관성을 보존하고 다의적 사회주의 개념을 피할 수 있다(Gauck and Neubert, 1996; Gauck, 1998).

여기서 '권력 엘리트'나 '정치 엘리트'라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6] 즉, 이는 동독 정권에서 정당 및 국가기구에 정치적 영향력

---

3) 1933년 나치에 의한 반공화주의적인 체제변화를 '합법적 혁명(괴벨)'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이는 인류 성과와 자유권의 파괴를 규정할 뿐이며, '반자유적·자유적대적 혁명'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4) 쿠바, 라오스, 베트남, 중국, 북한의 5개 국가만이 그들의 통치를 공산주의 이념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전 공산주의 국가들의 독재적 통치체제나 권위주의적 정부가 극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그 좋은 예이다.

5)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민주적'이지 않았으며 '공화국'도 아니었고 1989년까지 서독으로부터 주권적 국가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가들이 스스로 붙이는 이름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북한도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하고 있다.

6) 작센 주의 국무차관 마이어(Meyer)가 1997년에 구동독 정치적 엘리트의 존재를 부정한 예처럼, 여기서 사용된 '엘리트'라는 단어가 일정 이상의 지적 소양을 지닌 계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을 행사할 수 있었던 52명의 고위관료를 지칭한다.[7)]

권력 엘리트는 기능적 측면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공산주의 전반의 국가계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계급'이라는 개념은 시장경제 체제가 우세하지 않은 국가의 지도층을 의미한다(Elsenhans, 1981; Elsenhans, 1997). '정치'는 다수에 의해 생산된 자원에 대한 소수의 접근을 말한다(Elsenhans, 2005). 연금과 이윤은 잉여생산의 상이한 유형이다. 국가계급은 연금을 획득한다.

자본주의자들의 분파적 계급과 대조적으로 국가계급은 높은 중앙집중도를 보인다. 잉여생산의 사용에서 이들은 재투자를 종용하는 시장의 경쟁에서 벗어나 있다. 그보다 국가계급은 정치구조의 견고함이 위협받지 않는 한 사회적 잉여생산을 자신의 소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Elsenhans, 2001: 212). 국가계급은 특권을 위한 자신의 이해와 권력의 정당화 사이에서 행위한다.

이러한 국가계급의 기능적 설명은 해당 국가계급의 성격, 그 정치적 목적이나 잉여생산물의 분배 혹은 다수의 복지에 대해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국가계급은 착취적일 수도 있고 시혜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부를 자랑하는 국가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부는 연금에 기초한다. 국가의 수입은 대부분 석유의 수출로 얻어지고 있다.

공산주의의 국가계급은 그들의 권력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적대성에서 얻어낸다. 그들은 생산을 담당하는 다수와 권력기구 관료들 간의

---

7) 얀 빌고스(Jan Wielgohs)는 통치 엘리트와 기능 엘리트를 구분했다. 통치 엘리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an Wielgohs, *Biographische Betrachtungen der politischen Eliten in Ostdeutschland um die Zeit der Wiedervereinigung*(이 책의 3장 참조).

이해를 동질화하려고 한다.[8] 지속적이며 막대한 영향력과 통제 없이는 이러한 동질성은 얻어질 수 없다.

일단 여기서는 해당 주제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의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처분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저자는 동독에서 일어난 일들을 규범적 범주에서 다루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독일의 통일이 다수를 위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들이 있었는가? 특정한 결정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었는가? 이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의 분단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토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사회주의 ·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경고

혁명적·공산주의적 노동운동은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며, 시장형태의 경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개혁적 노동운동은 친자본주의적이며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의 부를 증대하고자 한다. 이 둘은 항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 둘의 차이와 그 위험성을 놀라울 정도로 일찍 간파한 사상가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는 당시 유럽에서 발생했던 두 노동운동을 그들의 목적에 따라 구분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를[9] 지지했다. 반면 혁명적 '급진적 사회주의'[10]는 그에게 '소인배들의

---

8) 루소의 "동질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국가법적인 근본토대를 제공한다.

9) 그 예로 Friedrich Nietzsche, *Kritische Studienausgabe*(KSA) Bd. 1(Walter de Gruyter, 1988), S. 199; KSA 2, S. 296(MA I, 457) 혹은 KSA Bd. 2, S. 312 이하(MA I, 478 f).

10) 같은 책, KSA 1, S. 117(GT 18); KSA 2, S. 295(MA I, 454) oder KSA 2, 299(MA

전제로서 '매우 반동적'으로 다가왔다.[11] 니체의 유고에 표현된 희망은 오늘날의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는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 나는 다음과 같이 희망한다. 몇 차례의 위대한 시도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스스로 부정되고 있다. 뿌리를 스스로 자르는 것과 같다. 세상은 넓고 인간은 아직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수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거나 많은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나에게 이러한 시도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12]

노동자들이 노동의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 니체는 "'노동의 품위'는 …… 노예의 꿈"이라 규정했다.[13] 이러한 그의 판단에 대해서 당대의 인물로는 폴 라파르그(Paul Lafargue, 1842~1911)만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최초의 개혁적 사회주의자였으며, 한편으로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사위이기도 했던 그는 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역사적 환상에서 벗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담담하게 길을 제시한다. "가능하다면 평화롭게,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Lafargue, 1991).

라파르그는 자본주의를 노동의 가치(임금)를 상승시킬 기회로 보았다. "자본가들에게 나무와 쇠로 구성되는 기계를 완벽하게 만들도록 강제하려면 살과 다리(뼈)가 있는 기계들의 임금을 인상해야만 하며 노동시간도 단축해야만 한다"(Lafargue, 1991: 40). 그는 실업이 정치적 분배의 문제라

I, 463).

11) 같은 책, KSA 2, S. 307(MA I, 473).

12) 같은 책, KSA 11, S. 587(NF Juni-Juli 1885, 37, 11).

13) 같은 책, KSA 7, S. 140, NF Ende 1870~pril 1871, 7(16).

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노동하기 위해서는 난파된 배에서 물을 공급하듯이 노동을 분배해야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Lafargue, 1991: 20).

반자본주의 혁명가들은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노동자들의 궁핍화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친자본주의적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안에서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성장을 바랐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형편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의 소득증대를 위해 투쟁했다(Elsenhans, 1983: 1~8).

초반에 혁명적-공산주의적 성격을 띠던 노동운동도 노동자들을 위한 장점을 인식하면 친자본주의적 행보를 걸을 수 있다.

한국의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와 성공적인 민주화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S. H. Kim, 2000: 55~57; Lee, 1997: 55~57). 초기의 노동계급은 혁명을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하지만 완전고용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노동계급은 대기업의 영향력하에 있지 않은 시민적·정치적 세력과 폭넓은 협력을 해왔다(H. J. Kim, 2002).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완전고용이라는 조건 아래 노동자들은 성공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인 전략에 적응한다.

2) 복지국가적 자본주의하에서의 반동적 혁명가들의 실패

동독이 존재했던 지난 40년 동안 약 45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DDR(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에서 BDR(Bundes Republik Deutschland)로 이주했다. 이러한 이주는 동·서독 사이에 장벽이 생기면서 높은 위험을 수반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을 선택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탈출 시도도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여행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취업금지, 재정상의 어려움 혹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을 각오해야 했다. 동독을 떠나는 것이 허가되는 시점은 예견할 수 없었다. 1980년대 말의 이주 희망자들은 라이프치히 소재 반체제 집단들의 중요한 잠재 요인으로 떠올랐다.

노예들이 조직화되고 그들의 저항이 증가할 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증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억압적인 노예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독의 반체제 집단들은 공개적인 활동들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억압기제가 확대될 것을 의도했다. 이는 정부의 체제 유지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통제를 당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르트무트 엘젠한스(Hartmut Elsenhans)는 자본주의의 경제성장과 계획경제 체제의 내부 모순 심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현실 사회주의, 혹은 계획경제 체제가 경제수치상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러한 착시현상은 자본주의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임금이 그들의 노동생산성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경제성장이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도 실현되고, 이는 바로 현존 사회주의의 내부 모순을 점차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Elsenhans, 1998: 122~132).

이 상황이 바로 1980년대 초에 나타났다.

자본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

> 주의에 대해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기술도입의 성과라기보다는 시장경쟁 체제에서 자본가들이 그들의 한정된 금융자원(자본)을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한 노동운동은 실질임금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저성장, 혹은 성장정체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시장에서 자본주의와 경쟁하기 위해 기술도입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자도입에 의한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비수요는 정체되어 자본을 축적할 수 없었다(Elsenhans, 1998: 130).

사회주의의 장점으로 제시되었던 높은 자본효율성과 투자비율은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에 의한 착취'(Elsenhans, 1981: 90; Elsenhans, 1996: 144)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에 의한 착취'에 대해 폴란드 자유노조가 1980년에 공산주의 정부에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다. '솔리다르노시치(Solidarnosc)'라는 이름을 가진,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의 첫 자유노조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노동자 여건을 칭찬했다. 그곳 노동자들은 더 나은 생활여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도 짧고 휴가일수도 더 많았기 때문이다.[14]

폴란드의 공산주의 정권은 1981년 12월에 공권력으로 응답했고, 비상사태 및 노동자들에 대해 전쟁법을 선포했다.[15] 이는 공산주의 국가계급

---

14) 사회국가적 자본주의의 대표격으로 스웨덴이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1989년 가을에, 여류작가 로제마리 슈더(Rosemarie Schuder)는 드레스덴에서 기민련(CDU) 신문인 ≪유니언(Union)≫에 스웨덴이 장래 동독이 추구해야 할 자본주의의 모범이라 썼다. 또한 칭기스 아이트마토프(Tschingis Aitmatow)는 1990년 여름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선진적 체제 비교가 있을 때, 지식인들이 스웨덴을 거론하면 공산주의 간부들이 조용해졌다고도 언급했다.

이, 자신의 특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만 '민족'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3) 복수심에 대한 정치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공산주의

니체는 집단적 복수의 원인은 "착취자들의 우둔함",[16] 굴욕적 힘의 불균형이라고 인식했다.

억압받은 집단은 권력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세력을 갖추게 되면 호혜적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저변에서는 공화제의 성립을 의미한다(게임이론에서 보면 경우 상호 상생적 상황이 된다).[17]

복수를 하려는 집단이 과거 그들을 착취했던 권력집단에 저항하여 승리하게 되면, 이후 양쪽 모두의 상황이 악화되는 위험이 있다. 이는 복수하는 집단이 상대방에게 하향평준화가 될 때, 복수하는 집단이 승리와 더불어 자유 혹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길을 스스로 가로막을 때 일어난다(게임이론에서는 위와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복수의 느낌'[18]은 ① 상대방의 우위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② 이러한

---

15) 폴란드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아담 샤프(Adam Schaff, 1913~2006)는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에서 이 상황의 모순성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폴란드 공산당의 해체를 권고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조직화를 금지시키는 노동당은 더 이상 '노동당'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1982년 "부르주아적이고 수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정당에서 탈퇴당했다.

16) Friedrich Nietzsche, KSA 11, S. 587(NF Juni-Juli 1885, 37, 11).

17) 같은 책, KSA Bd. 2, S. 289 f(MA I, 446). 니체는 이 글에서 1918~1919년에 벌어진 사회민주주의적인 동시에 공화주의적인 혁명이 낳을 권력문제를 예측하고 있다.

가치를 실질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능력, 우위의 상대방과 동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복수의 행동은 "단순히 혐오·질투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동시에 더 우월하다고 자인하지만, 이를 또 무조건 모방할 수 없어 '자신의 길'을 가야 함"(Bochmann and Stekeler-Weithofer, 1998: 11~23)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수는 능동적이며 반동적이다. 시인 카를 슈테른하임(Carl Sternheim)은 이를 적절히 표현했다. "원한은 마치 여우가 포도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시다고 하는 것과 같다"(Steinheim, 1965).

공산주의도 이런 집단적인 복수심의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복수는 복수의 상대방에게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행위자들을 일차적으로 약화시킨다. 반자유적 복수는 자유로운 갈등해결을 방해한다. 공산주의의 권력 엘리트들은 아무리 권력을 많이 행사해도 현실적인 열등의식에 대한 모순적 감정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들은 삶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권력 엘리트들은 나라 안에서 자신의 부를 자랑할 수 없었다. 그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노동계급과의 동질성에서 찾기 때문이다.[19]

공산주의 엘리트가 개방성을 누리지 못할수록,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

---

18) 테오도르 레싱(Theodor Lessing)은 니체가 프랑스어에서 가지고 온 개념인 'Ressentiment'을 'Rückschlagsgefühl'로 독일어 번역했다. Theodor Lessing, *Nietzsche*(Berlin, Ullstein, 1925), S. 44.

19) 서독의 언론인들에게는 동독 엘리트의 숨겨진 '사치', 예를 들어 사냥을 위한 전원주택 등이 오히려 작고 소박하게 다가왔으며, 고위관료들이 반드리츠(Wandlitz)라는 숲 인근의 숨겨진 지역에 몰래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동독인들을 왜 분노케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국가이념의 맥락에서만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는 통로인 정보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들은 강한 권력을 지녔다는 외관을 연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Wulf, 2009: 3).[20] 그들은 이미 공산주의 국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국민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엘리트들은 국민의 피난이나 조직화된 저항을 효율적으로 막을 때에만 그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

4) 공산주의의 극복: 도피 혹은 상쇄

공산주의 권력기구는 피난 움직임과 조직화된 저항이 함께 일어날 때 효과적으로 분열된다(Kloss, 2005: 363~379).[21]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조직화된 저항운동이 복수로 확산될 위험은 없다. 복수의 양면적인 구조는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을 더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 내의 조직화된 저항운동에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복수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혐오감은 자유적대적인 복수운동에 대한 지양의 계기가 된다.[22]

---

20) 예를 들어 북한이 2006년 10월에 실시했던 초기 핵실험들을 생각해보자. 북한은 2005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다.

21) 독일 사회학자 칼 디터 옵(Karl-Dieter Opp)과 데틀레프 폴락(Detlev Pollack)의 잘못된 진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9년 혁명의 원인을 저항된 조직과 이주 희망자들 간의 전환이론에서 찾기도 한다. 'Voice(참여)'와 'Exit(탈퇴)'[히르쉬만(A. O. Hirschmann)의 '탈퇴' 개념]의 체제전복적인 협력은 라이프치히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22) 권력 엘리트들은 그들의 굴욕감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며 복수 행위에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그 예로 동독 말기 관료들의 자살을 들 수 있다. 저항운동의 편에서는 오히려 의외로 무력의 사용이 드물었다. 폭력 행사를 하는 경찰에 대한 투석행위들

권력 엘리트의 편에서 공산주의 이념은 시스템의 견고함이 위험해질 때 그들의 유일한 정당성을 잃어버린다는 위협이 있을 뿐이다. 권력 엘리트들에게는 두 개의 도피수단이 가능하다. 권력 엘리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의 다른 이념[23]으로 전환을 시도하거나,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 체제로의 변화를 지지할 수 있다.

권력 엘리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에 힘입어 시장경제로의 전환 시 '상위'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24] 자원에서의 우위는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며, 동시에 사회적 위계질서에서 상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국가계급 대부분이 국가기관에서 그들의 지위를 민주주의 내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9년의 공산주의 권력 엘리트들이 체제 붕괴에 대해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 비롯된 전환이론에 따르면 국가계급은 조직화된 저항의 압력에 따라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된다. 개혁에 호의적인 온건파

이 알려진 정도에 그친다.

23) 김일성은 북한의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이를 그가 주창한 주체 이념으로 대체했다. '주체'는 인간이 본인의 의지로 주위 환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개인의 이러한 힘은 그러나 집단에 속했을 때, 지도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넓은 의미로서의 주체사상은 정치적 독립과 국가의 경제적 자립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념 전환은 단순화를 통한 견고화 시도로 볼 수 있다.

24) 다음의 토론 내용을 참조하라. Michael Hofmann, "Lebensweltliche Veränderungen der ostdeuschen Machteliten vor und nach der Vereinigung"(이 책의 5장 참조)과 Markus Pohlmann and Jong Hee Lee, "Ostdeutsche Machteliten im Wandel der Sozialstruktur nach der Wiedervereinigung"(이 책의 2장 참조).

들이 전통적인 강경파가 가지는 거부권을 중화시킬 수 있고, 조직적 저항 세력 내에서 협상에 호의적인 세력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합헌적인 정치적 협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양식은 북한이나 동독 같은 분단국가일 경우에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체제 반대편은 권력의 이양을 혼자서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저항세력은 권력 엘리트의 정당성과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 이미 최적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요구는 예전의 체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에 있으므로 더 나은 상태를 위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오래된 공산주의 권력 엘리트 내의 '온건파'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재통합 상대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된다.

조직화된 저항세력이 대규모시위에 성공하면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이다. 동독의 민중이 "우리들이 민중이다"라는 구호로 권력 엘리트들의 정당성을 박탈했을 때, 권력기구는 더 이상의 방어를 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 시스템은 극복되었다. 이로써 통일을 위한 길이 열렸다.[25]

이제 민주주의적 재시작을 위해 결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특권이 부정되어야 했고,[26]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밑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보상이 따라야 했다. 피해, 사용하지 못한 시간,

---

25) 필자는 민주주의적인 발언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몇몇 고위관료들을 알고 있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대가 다수가 아닌 용기 있는 소수라 했다. 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응답한다. "무장을 하지 않은 용기 있는 소수가 이 국가를 한낱 시위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적어도 동독의 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6) 어떤 특권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인권 혹은 기본권의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으로써 없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혹은 정보의 자유 등이 있다.

이념적인 굴욕감, 박탈된 기회 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적어도 공산주의 체제하에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과거의 국가계급에 맞추는 것이 필요했다. 법치국가적 기준에 의하지 않은 관료들은 – 예를 들어 동독이 UN 결의 비준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것처럼 – 재판을 받아야 했다.[27)]

체제전복적인 동독의 시민운동은 그들이 거둔 승리의 신속성에 대해 놀라워했다. 이들은 독재체제의 기득권자들이 적어도 10년 동안 의회 및 민주적인 기구의 공직에 진출해서는 안 되며, 공적 업무를 수행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득권자들이 국가의 비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통일은 시민운동 세력 대다수가 지지했다. 늦어도 1988년에 체제전복적인 집단 내부에서 옌스 라이히(Jens Reich)의 질문이 논의되었다: "동독이 민주적인 국가로 전환된다면, 동독이 개별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Asperger, 1988).[28)]

서독은 동독을 1989년까지 국가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서독

---

2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고위간부에 대해 진행되었던 뉘른베르크 재판은 인류의 커다란 진보를 보여준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히틀러 당시에 제정되었던 실정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히틀러의 제3제국이 법치국가가 아니었으며, 법치국가원리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 더 나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리움을 반영한 베르벨 볼리(Bärbel Bohley)의 인용구들이 모든 동독 반대자들의 전체 의견이라는 '전설'은 아쉽게도 언론인들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옌스 라이히 같은 인물도 "NEUE FORUM"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Lettre International*에 1988년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기사들은 체제전복적인 집단들에서 논의되곤 했었다. 라이히는 동독이 성공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국가로서 동독의 잔존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여기서 '아스퍼거(자폐증)'라는 유머러스한 가명을 사용했다.

의 총리였던 헬무트 콜(Helmut Kohl)은 독일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누구의 상황도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더 많이 나아질 것이다."(Kohl, 2009).

2. 동독의 권력 엘리트

1) 어느 핵심간부의 역사적 증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과 국가기구의 내부인(핵심간부)이었던 디트마르 켈러(Dietmar Keller)는 1984년부터 문화부 차관, 1989년 11월부터 동독의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1993년(앞으로 인용할 발표문이 공개된 해)에 민주사회당(PDS, 당시 동독 지역 SED 정당의 다른 이름) 당원으로 통일 이후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이 되었다. 그는 독일의회의 한 위원회에서 1946년에 창당된 SED는 단 한 순간도 민주적이거나 시민적 속성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창당할 당시부터 군사적인 엄격한 규율과 수직적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켈러는 당이 전위당과 대중당의 이중적 성격을 가졌었다고 진술했다. 대중 정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당적을 가질 수 없는 18세 이하까지 포함한 1,600만 명의 동독 인구 중 평균 200만에서 230만 명이 당원이었다는 것이다. 동독 인구 중 약 80만 명은 당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다.

전위당으로서의 특징적 요소는 당원 중 소수가 당과 국가기구를 장악했다는 데 있다. 이 집단들은(토마스 암머에 의하면 그 구성원은 약 30~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Ammer, 1995: 464) 100개가 절대 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 특정 소수가 점점 축소되고 이 소수에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되

는 형국으로 변화되었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들은 조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렇게 권력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당 밖에서 정치활동을 해야 했는데, 이는 바로 재야 활동의 잠재력이 되었다(Keller, 1993: 3013~3022).

켈러는 단 한 번도 국가정당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 간부의 지적 수준을 그의 긴 증언을 인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은 역사적으로 예수교단 같은 규율을 요구했지만, SED는 예수교단의 신앙심은 존재하나 지적 수준은 그에 못 미쳤기에 한 종파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진술하는지 잘 알고 있다. …… 역사가 발전할수록 SED의 상층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집행부에서도 지적 잠재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1945년 이후 당을 건설한 1세대들은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다. 그러나 통일 직전의 당 지도 기초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물이 수두룩했다. 그들은 직업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단지 당 학교의 속성과정을 이수했을 뿐이다(Kelle, 1993: 3016, 3018~3019).

켈러에 의하면 SED의 정치국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졌고, SED의 중앙위원회는 마치 정부 위에 군림하는 작은 정부 같았다고 한다. 정부와 국가기구들은 단지 이런 당의 결정을 수행하는 일선행정기관의 역할만 담당했는데, 그 사이에 국가안전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기구는 상시적으로 당의 지시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했다(Keller, 1993: 3021).

2) 통일된 국가에서 권리 분할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일 협정

현재 독일 재무부 장관이며 1990년 2월 독일연방정부의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는 콜 정권 당시 수감된 동독의 고위 간부 중 죄질이 경미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그는 공산당의 핵심간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한때 동독의 국가정당과 관계된 군소 정당들은 개별 정당으로 분리되었다. 서독의 정당들은 가능한 한 제대로 작동하는 동독의 정당들을 미래의 파트너로 찾았다. 1989년 혁명의 결과로 당과 시민단체가 1990년 3월에 자유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고 이는 동독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동독에서는 보수적인 기민련(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이 다수당으로 정부 여당이 되었다. 서독에서는 CDU와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이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두 정부 사이에는 소위 '통일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협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협상당사자의 다른 편은 자신(동독 정부)의 해체와 소멸에 대해 협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독 헌법에는 동독이 통합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문이 있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통일협약에서는 선거 후 동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로서, 그리고 협상의 당사자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동독을 인정함으로 인해 동독의 법도 독일연방정부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Lüderssen, 1992: 148).

이 협약으로 결국 독일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지만, 동시에 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는 두 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인정

했다(이는 현실적으로 전환기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통일 독일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역별로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모든 민주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동등한 삶의 조건"이라는 법적 기본권은 훼손되었다.[29] 사회와 노동의 기본권과 임금협상권에서 현재까지 동·서독에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30]

두 독일에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3) 통일 독일에서의 구동독의 국가계급과 그들의 정당인 SED의 변신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in Deutschlands, SED)[31]은 동독의 국가계급 정당이었다. 1989년 통일로 정치적인 지도역할은 끝났고,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되었으나 완전히 해체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NSDAP(Nationalsozialistischen deutschen Arbeiterpartei, 나치당)가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

29) 1994년 10월 24일에 단행된 기본법 개정으로 제72조의 제2항 "동등한 삶의 조건"이라는 문구가 "같은 가치의 삶의 조건"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독일 대통령이었던 호르스트 쾰러도 "불평등한 삶의 조건"이 동·서독에 존재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30)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SPD와 녹색당 연정하에서 무기한 지급되던 실업수당을 2005년에 폐지했고, 사회복지수당도 기본생계비 수준으로 인하했다. 그리고 일 년 뒤에 동독의 실업수당을 서독 수준으로 인상했다. 2009년에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다단계로 조정했으나, 동독 지역에는 서독 수준보다 낮게 책정했다.

31) 통일정당이라는 표현은 모든 정당이 이 정당으로 통합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특히 SPD는 강제적으로 공산당에 흡수되어야 했다.

SED에 종속된 동독의 정당들은[32] 정치적 독립성과 영향력을 갖지 못했으나 대신 기업이나 상점을 운영함으로써 그로 인해 창출되는 부를 당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이 점은 통일 당시 서독의 정당들에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서독 정당들이 그들의 자매정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재산을 인계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 안정과 함께 당원 수가 증가하는 소득도 있었다. 그러나 독재시대의 '부유한 유산'이 없는 사민당(Sozialdemokratisch Partei Deutschlands, SPD)과 녹색당, 그리고 시민운동 세력은 보수정당과 달리 당원 수도 적고 사회적 지지기반도 매우 취약했다.

반면 SED는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부유한 정당으로 부상했다.[33]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Partei der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으로 변경한 SED는 서독 지역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겉으로는 유로커뮤니즘(Eurocommunism)과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최근 PDS는 다시 '좌파정당(Die Linke)'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일단 당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이 정당의 지지기반이 서독 지역에서는 매우 취약하지만, 과거 동독의 기득권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동독의 수도 베를린 동부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거의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

3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artin Rissmann, *Kaderschulung in der Ost-CDU. Zur geistigen Formierung einer Blockpartei*(Droste, 1995).

33) SED의 수백만 동독마르크 재산 중 2/3가 통화 통합과정인 1990년 초에 이미 사라졌다. 1억 600만 동독마르크가 모스크바의 푸트닉 사로 이체되었는데 그 후 아무도 그 행방을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ubertus Knabe, *Die Täter sind unter uns. Über das Schönreden der SED-Diktatur*(List, 2008); Hubertus Knabe, *Honeckers Erben. Die Wahrheit über DIE LINKE*(Propyläen, 2009) 참조.

4) 2005년까지 구동독 엘리트들의 조직적인 전략: 구동독의 정체성 회복과 희생양의 연출

PDS는 독일 통일 이후부터 전술적 딜레마를 갖고 있었다. 우선 PDS는 안정적 운영과 생존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독일 전역, 특히 구서독 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당원의 이해를 대변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PDS는 어떤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가? 해체된 국가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은 '동독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 형성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선전·선동가들은 대중의 정체성을 이해관계인 것처럼 전환시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프랑스의 종교 사회학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는 마술사가 권력을 상실한, 혹은 파문당한 사제라는 하나의 이론을 제시했다(Mürmel, 1985). 그는 마술사가 미신으로 전락한 사라진 신앙을 통해 은밀하게 제도권 신앙에 대항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주술적 의식에 따라 그리는 원(circle)은 소멸된 사원을 나타낸다. 주술적 의식은 상실한 힘이 아직 기적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따른 행위이다. 기존 신앙이나 사상에 실망한 사람들은 역시 기존 권력에서 배제되거나 퇴출당한 사교집단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 한다. 소외집단들은 이러한 주술적 신앙이 그들의 불만족스러운 처지를 극복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을지라도, 기존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면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사교 집단을 따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회학적인 기능을 현재 좌파정당(Die Linke)으로 당명을 변경한 PDS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 SPD에 실망한 사람들도 'Die

Linke'에 가입해서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34]

필자는 지금까지 단기간 내에 혁명이 발생하리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SED·PDS·좌파정당의 당원을 만난 적이 없다. 과거 동독의 엘리트들이 이 좌파정당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방과 지방 의회는 공식적으로 과거 동독의 공산당 정권하에서 불법으로 비밀 감시활동을 한 이들을 모두 퇴직시켰다.[35]

당직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89년에 SED의 당직자 수는 4만 4,000여 명이었다. 현재 좌파정당의 당직자 수를 알고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4년 PDS 당직자의 평균연령은 68세였다.

SED는 1983년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단체들과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동독인들이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선전문구로 "서독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자비를", "군림하는 사법부의 문제점(Sieger Justiz)", "연금 수령자에 대한 형사처벌 권리(Rentenstraftrecht)" 등을 내세웠는데, 이 캠페인은 성공을 거두었다. 자유선

34)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슈뢰더 총리 밑에서 1998~2005년 사이 정당 역사에 유례가 없는 후한 분배정책을 시행했다. 세금은 역대 최저였다. SPD는 연금과 사회보조금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당원이 SPD를 떠났다. 이 중에서 일부는 WASG(Wahlalternative Arbeit und Soziale Gerechtigkeit)를 설립했다. 2005년 선거를 앞두고 시간상 압력으로 사민당 당수였던 라퐁텐(O. Lafontaine)을 포함하여 WASG는 PDS에 합류하게 되었다. WASG의 영향력 확대는 SPD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SPD의 오른쪽 날개가 SPD의 정책노선에 반대하여 반사적으로 PDS의 서독 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35)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라이프치히에 거주하는 폴커 퀼로브(Volker Kuelow) 박사는 동독 비밀경찰에서 보수를 받고 감시활동을 했었음에도 시의회의 의원으로, 그리고 현재는 작센 주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를 통해 최초로 구성된 동독 의회에서는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기득권을 박탈했는데, 통일된 독일연방의회에서는 구동독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기득권을 다시 부활시켜 이들에게 100만 유로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했다.[36]

사회분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또 받아들여지고, 1990년 이후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 분리된 지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독일에서, PDS는 '구동독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PDS가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요구들을 사회정치적 주제로 채택하고는 있지만 그 정당의 권력지향점은 항상 과거 동독의 권력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사회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PDS가 다른 정당과 연정을 형성하게 되면 연정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자기 당의 프로그램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정체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5) 당 간부(노멘클라투라와 전위대)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제도는 구소련에서 도입되었다(Brinksmeier,

---

36) Steffen Winter, "Soli für Margot. Politiker, Professoren, Vopo-Offiziere – Die üppigen Sonderrenten der DDR-Eliten werden zur Milliardenlast für die neuen Länder – das Geld fehlt beim Aufbau Ost", *Der Spiegel*, Nr. 16(2003), S. 146 f., S. 147. "동독은 일반적인 60세 이상의 연금계급 외에 소위 추가 또는 특별부양체계로부터 엘리트를 충원함으로써 체제를 지탱해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들의 일부는 단 한 푼의 동독마르크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높은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28가지 호사스러운 부양체계는 통일협약과 이후 연방독일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99; Bauerkämpfer, 1999; Wagner, 1997; Zimmermann, 1994). 동독 당 간부 집단의 규모는 전체 동독 성인 인구 1,200만 명 중 약 3%인 35~4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마스 암머(Thomas Ammer)는 동독의 간부 수를 대략 18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 군대와 경찰, 국가안전부, 동독 다른 정당의 간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가안전부의 간부 약 10만 명, 군과 경찰의 고급장교 약 3만 명, 비밀경찰의 간부 약 15만 명 등이 이 노멘클라투라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간부들은 정치·이념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서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세습이나 연결망을 통해 인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Ammer, 1995: 463~471).

6) 국가안전부

실비아 카부스(Sylvia Kabus)는 라이프치히의 '둥근 구석'[37]에 참석한 국가안전부의 한 직원이 흐느끼면서 하던 말을 기억했다. 그는 이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고는 "누가 누구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살았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Kabus, 1990: 79~83). 국가안전부는 인구 비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밀경찰이다. 이들은 스스로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도 세 종류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① 하위 관료들은 지속적으로 승진 병목, 혹은 적체 현상을 경험했다 (Gieseke, 1999: 201~240; Gieseke, 2000).

---

37) 라이프치히 시의 비밀경찰 지부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② 고위 간부급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었다.

③ 신규인원은 대개 세습이나 연결망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되었다.

1989년 전체직원 현황에 따르면 기밀요원 50% 이상은 친척 중 최소 한 명이 국가안전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Gieseke, 1999: 125~145). 당시 연방정부 내무부 장관이자 통일협약의 최고 책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는 동독 국가안전부의 인물보호국(Personenschutz)을 통째로 서독 정보부에 편입시켰는데, 이 부서는 통일 이후에도 매우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통일 이후 택시 운전사의 대부분은 이 국가안전부 직원 출신이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이들을 선호했는데, 이들이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독일 정부는 구동독 관료들을 일괄적으로 해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독 시절의 비밀경찰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구를 통해 검증을 거쳐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해고의 범위와 유형은 그 기관의 장이 결정했다. 연방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은 불가능했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 기관의 정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날 적어도 1만 7,000여 명의 구동독 비밀경찰 출신이 독일 정부의 관료로 일하고 있다[38].

---

38) *Leipziger Volkszeitung*(LVZ) vom 10. Juli 2009, S. 1, "1만 7,000명의 비밀경찰이 국가의 관료로 일하고 있다"; LVZ vom 4. Juni 2009, S. 2, "수백 명의 비밀경찰이 아직도 통일 독일의 경찰로 일하고 있다". Uwe Müller and Grit Hartmann, *Vorwärts und Vergessen! Kader, Spitzel und Komplizen: das gefährliche Erbe der SED Diktatur*(Rowohlt, 2009) 참조.

7) 교육기관에 대한 소견

동독의 교육기관 종사자들도 권력 엘리트에 속한다. 그들의 활동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학생들은 1989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는 톈안먼(天安門)의 시위를 주도했던 중국의 학생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39) 1989~1990년에 필자는 라이프치히 원탁회의에 인권과 교육 분야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교육분야에서는 비록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했다고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새로운 의견이나 제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 한 동독 학교의 교장도 참여했는데, 그는 마르크스-레닌의 이념을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수학담당 교사였다. 그 후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를 교장직에서 해임했다. 몇 년 뒤 필자는 그를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윤리교사가 되기 위해 재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그는 짧은 강의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이 사람이 모든 선생의 전형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를 통해 동독의 엘리트들이 과연 통일 이후 독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로서 그는 부적격자이나 퇴직을 시키기에는 너무 젊다. 실업에 대한 공포는 퇴출에 대한 거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

39) 이 혁명에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했고 집단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라이프치히의 카를 마르크스 대학교 학생들조차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Werner Vogler, Hans Seidel and Ulrich Kühn(Hrsg.), *Vier Jahrzehnte kirchlich-theologische Ausbildung in Leipzig. Das Theologische Seminar: die Kirchliche Hochschule Leipzig*(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3) 참조

8) 결론 및 요약

결론적으로 동독의 권력 엘리트들은 통일 이후 그들에 의해 고통받았던 일반 동독인들과 달리 매우 양호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재산을 몰수당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들의 모든 특권이 상실되지도 않았는데,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통일협약'에서 사법부는 동독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독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759명의 동독인과 245명의 서독인이 재판을 받았으나 금고형 또는 형집행 정지로 대부분 석방되었다(Marxen·Werle·Schäfer, 2007).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은 50명도 안 된다. 과거 동독 작센 주의 한 의원은 사법부를 통해서, 그리고 구동독의 「희생자 보상법」을 이용해 명예회복을 했는데, 이는 동독을 불법적인 국가로 규정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그에 따른 희생자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자기에 대한 서류(감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역사상 최초로 창설하는 업적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구동독 정부의 저항과 서독 정부의 거부를 무릅쓰고 관철한 것이다.

"그 누구도 과거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대신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서독 콜 총리의 약속은 현실화된 것일까? 필자는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동 총량이 축소된 대신 생산성은 훨씬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의 부담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의지 문제인 것이다. 민주적으로 조정되어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독에서는 실업자와 기초생활 지원자들조차 동독의 최저임금 집단에 비해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하르츠 법(Hartz Gesetz)」이 시행된 2005년부터 기초생활 보호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억지로 노동을 해야만 한다. 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도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이 권리를 주장하면 이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독에서도 1985년까지 실업자들에게 노동이 강요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실업자 집단이 동독에 비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1994년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CDU·기사련(Christlich-Soziale Union, CSU)·FDP로 구성된 정부 여당은 피고용자들의 다단계 보험 지불 방식을 철폐하려고 했으나 야당인 SPD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 후 SPD와 녹색당 연정의 슈뢰더 총리에 의해 「하르츠 법」이 야당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임금 삭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나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독일 국민은 기본권을 누리고 있다.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하르츠 법」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주 정부가 13년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을 12년으로 축소시켰는데, 이는 12년제를 채택했던 동독의 교육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CDU 정치인인 노르베르트 람메르트는 독일 제도교육의 부정적인 부분이 동독이 몰락한 원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 통일의 결과 서독의 정당들은 특정 분야에서 동독 수준으로의 하향 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한국에서 재현되지 말아야 한다.

3. 한국의 통일을 위한 제언

한독사회학회 회장 전태국 교수와 통일연구소 소장 서재진 교수는 2009년 9월의 학술대회에서 그들의 기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독일의 통일이라는 경험은 한국을 위해서도 귀중한 경험이다. 우리는 이번 세미나가 한국 통일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교류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매우 흥미롭다. 따라서 필자는 통일을 위한 몇몇 조언 혹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쩌면 한국에 대한 나의 상식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나중의 토론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이후 동독의 체제전복적인 세력들은 소련과 고르바초프가 더 이상 동독 정부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를 한반도 정세에 비춰보면 중국은 구소련에 비견된다. 현재 중국에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세 개의 금기사항이 있다. 자유노조, 공산당의 선두적 지위, 인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민주화 요구는 점차 비등하고 있으며,[40] 중국의 관심이 북한 독재체제의 보호보다 자국 내의 권력유지에 쏠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

40) 「08 헌장」은 성공을 거두었던 「77 헌장」(1977년 1월 체코의 인권탄압에 대한 진정)의 후속을 자처하며 자유권, 권력분립, 언론·집회·종교의 자유 및 중국 내 일당독재의 종식을 요구했다. http://www.eu-china.net/web/cms/upload/pdf/materialien/hric_2008_charter_08.pdf(영문 버전); http://www.scribd.com/doc/30527126/2008-China-Charta-08-Deutsch(Jörg-M. Rudolph에 의한 독문 버전).

1) 분단의 비용과 통일의 비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한국의 북한 흡수는 경제적 우려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 및 남한의 경제수준 차는 이전 동독과 서독의 차이보다 크며,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남한 국민의 생활수준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Jeon, 2009).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대 입장은 어떠한가? 학술대회 중 김영희 대사가 강조했듯이 분단의 비용도 항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높은 국방비와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인도적 지원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키지도 않으며 북한의 정치적 구조도 바꾸지 못한다.

UN의 추정으로는 2,3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600만 명이 기아에 허덕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도적 도움이 '전체주의적 국정운영'에 따라 분배된다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Schloms, 2000).

미국 외무성은 북한이 국내총생산의 4분의 1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41]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남한 역시 상당한 정도의 전투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은 통일 이후 양쪽의 민간 경제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

41) AP in Focus online vom 6. Oktober 2008, "Nordkorea: Ein Viertel des BIP für Militärausgaben", http://www.focus.de/panorama/welt/nordkorea-ein-viertel-des-bip-fuermilitaerausgaben_aid_338429.html

골드만삭스의 권구훈에 의해 발표된 24장 분량의 논문에는(Kwon, 2009) 짐 오닐(Jim O'Neil)이 참여했는데(Ramstad, 2009), 그는 이전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을 성장하는 경제 대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숙달된 노동력, 우라늄·석탄·철광석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유리한 인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독재체제의 종결과 남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의 첫 단계에서 북한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7%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 21세기 중반에 다다르면 통일된 한국은 프랑스, 독일 및 일본보다 더 높은 국민총생산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독재체제에서 벗어나면 그들에게 통일이라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동독에서 그랬듯이 공포심에 의한 탈출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공산주의 엘리트가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만이 남한으로의 대규모 탈출행렬을 막을 수 있다.

모든 독재체제 내에서(몇몇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혹독한 부정적 선택(Negativ-Auslese)이 행해진다. 의지가 약하고 특징이 없으며 부족한 사람들이 선호되고, 용기 있고 지적이며 창의적인 사람들은 배제된다. 모든 고귀한 것이 무너진다. 통일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이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독재가 길어질수록 재건을 위한 비용 역시 상승한다. 장래의 통일 한국 자본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의 실업률 증가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려면 정치적 노련함이 요구된다.[42]

---

4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Albrecht Müller, "Der abgebrochene

2) 북한에는 조직화된 저항세력이 존재하는가?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그랬지만 아직 북한의 조직화된 혁명적 저항세력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43]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1980년대 후반 서독에서 동독을 평가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동독에서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운동이 불가능했고, 저항이 있더라도 약간의 비판과 대안제시 정도일 뿐이지 체제전복이나 혁명운동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 인식되었다. 국가권력이 저항 집단을 무조건 억압하고 구속한다면 저항 집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2009년 중반에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자문하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북한 붕괴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했다. 붕괴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 불황이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동독에서보다 북한이나 쿠바에서 먼저 혁명이 발생했을 것이다. 필자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저항운동가를 믿고 싶다. 여러분에게 그리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저항운동단체가

Vereinigungsboom", *Vorwärts*(März, 2004), S. 11 참조.

43) 2009년 9월, 독일 개신교 연합회 회장인 볼프강 후버 주교(Bischop Wolfgang Huber)가 개신교 사절단과 함께 남과 북을 동시에 방문했다. 1989년 이후 20년 만에 남·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북한의 교회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지만 국가 소속의 교회와만 접촉할 수 있었다. 필자는 서울에서 전 튀링겐의 주교인 크리스토프 켈러(Bischop Christoph Kaehler)를 만났는데, 그는 필자에게 북한의 한 저항운동가에 대해 남한의 여러 교회와 단체에 물어 보았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저항운동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알려지기 전에 즉시 체포되어 강제수용소로 압송되거나 사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보안요원들에게는 훨씬 위협하게 보일 것이다. 그들은 권력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그렇게 많은 강제수용소[44]가 있다는 것은 북한 그 어디엔가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용감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다. 독재자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에 강제노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3) 한국의 통일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던 햇별 정책은 북한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 2008년 2월부터 한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원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가난한 북한에 지원하는 원조와 핵무기 감축을 연계시키려 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해 북한은 매우 불쾌해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전임 대통령의 장례식 때 사절단을 보내 대통령과 중단된 대화의 복원을 시도했다.

1989년 이전 서독의 정당들은 동독의 조직화된 체제저항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웠다.[45] 한동안 군사적인 긴장 완화 정책과 동유럽의 독재자들에 대한 저항운동 지원은 모순된 태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서방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대중 지지가 매우 취약했던 공산당에 대한 재정 지원을 동시에 거리낌 없이 시도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말살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

44) 현재 북한에는 약 30개의 강제 수용소가 있고, 100만여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인구는 총 2,300만 명 정도이다.

45) 그러나 SPD, 녹색당, CDU에 속한 정치인들이 동독의 저항 운동을 지원했었다. 다만 이 지원은 정당 차원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모순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현명한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하여 한반도의 공산주의 극복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국 국민의 탈출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공산당의 권력 엘리트들은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주장이 정확하다면, 권력 엘리트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두 방향에서 모든 정치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인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조직적 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런 의미에서 14개의 지원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론 주제로 제시하려고 한다.

① 북한의 체제저항 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원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라. 정치적 난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탈출 기회를 제공하라.

②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여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라.

③ 정보에 대한 자유는 표현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북한 여행이 가능하다면 그곳을 방문하라. 그리고 억지로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을 가져가진 말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을 갖고 가서 그곳에 놓고 오라. 필자는 북한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전사의 본부'가 전단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전달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 기구의 회원들은 거대한 풍선을 통해 전단을 북한에 뿌리고 있다. 풍선을 일정한 고도에서 터지게 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게 북한에서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풍선들은 주로 남북의 접경 지대에서 띄우고 있다.

④ 라디오는 효과적이고 저렴한 정보전달 수단이다. 자유 북한 라디오

방송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방송을 하고 있다. 청취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라디오가 매우 많다고 한다.

⑤ 한국 정부에 북한의 정치범들을 사오라고 요구하라. 그렇게 되면 북한의 반체제 세력들도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남한 정부에 의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구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 반체제운동의 참여를 그리 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⑥ 북한의 정치범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남한에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독이 잘츠기터(Salzgitter)에 동독의 정치범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⑦ 통일과정에서 보편적인 인권에 서명한 UN 회원국으로서 남한은 국가로서 북한과 북한의 형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⑧ 통일 이후 모든 권리가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불공정 행위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된 국가에서 공산당 권력 엘리트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⑨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가안전부에만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경찰과 군대, 당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수집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이 공개되어야만 한다.

⑩ 공직에서 정치적인 오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을 축출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지금부터 북한의 관료제를 담당할 수 있는 관료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통일 시기에 교사들을 북한에 보내 미래를 건설하라.

⑪ 통일 이후 북한의 국가정당인 노동당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의 재산이라도 몰수해야 한다.

⑫ 북한의 연금생활자들에게 직업·근무연한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더욱 오래 누리게 될 것이다.

⑬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은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⑭ 한국의 정치인 중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거나 호의적인 정치인들을 선택하지 마라. 강한 정치력만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4) 한순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보기

1989년 여름, 체코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이 동독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동독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독 국민은 몇 달 뒤 공산당 서기인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마지막 정치망명자가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91년에 이미 소련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호네커가 소비에트 동료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모스크바의 칠레 대사관으로 피신했을 때 북한이 그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망명처 제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동독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머가 나돌았다. 북한은 그들의 제안을 곧 철회했는데, 이유는 호네커가 나타나는 곳에는 장벽이 무너지고 경계선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에 호네커는 칠레를 망명지로 선택했다.

이제 진지하게 몇 마디 덧붙이고 싶다. 동독과 북한은 공산주의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공동의 현실적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대한

정치적인 실험이 독일과 한국에서 행해졌고, 이로 인해 이 두 국가는 강력하게 대치되는 민족의 분단을 경험했다. 분단된 두 세력은 각각 민족주의, 인종주의, 혹은 문화주의와 같은 이념을 통해 상호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으로 형성된 집단적 정체성은 우리가 왜 분단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다. 양국 분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구조가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당시 서독의 정당과 정치인들보다 더욱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멀리 내다보는 동시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실패의 교훈을 배우기 바란다. 북한의 반체제 저항운동 단체나 통일운동 집단을 도와주기 바란다. 모든 한국인을 위해 남과 북이 독일보다 더 성공적으로 국가 통일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Ammer, Thomas. 1995. "Fragen zu Struktur und Methoden der Machtausübung in der SED-Diktatur." Enquê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Materialien der Enquête-Kommission*. Nomos und Suhrkamp, Bd. II-1.

Asperger, Thomas. 1988. "Mitteleuropa als ruhendes Inertialsystem?" *Lettre international*, Heft 1.

Bauerkämpfer, Arnd. 1999. "Kaderdiktatur und Kadergesellschaft. Politische Herrschaft Milieubindung und Wertetraditionalismus im Elitenwechsel in der SBZ/DDR von 1945 bis zu den sechziger Jahren." Dankwart Brinksmeier(Hrsg.). *Eliten im Sozialismus. Beiträge zur Sozialgeschichte der DDR*. Böhlau.

Bochmann, Klaus and Pirmin Stekeler-Weithofer. 1998. "Ambivalenzen der Okzidentalisierung: ein Projekt." Dorothea Müller(Hrsg.). *Ambivalenzen der Okzidentalisierung: Zugänge und Zugriffe*.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S. 11~23.

Brinksmeier, Dankwart. 1992. "Nomenklaturkader in der ehemaligen DDR." *Horch & Guck*, Heft 3, S. 32 ff.

Brinksmeier, Dankwart(Hrsg.). 1999. *Eliten im Sozialismus. Beiträge zur Sozialgeschichte der DDR*. Böhlau.

Commodities and Strategy Research. 2009. *Economics Paper* No. 188, September 21. https://360.gs.com; http://www.scribd.com/doc/20520995/North-Korea-Goldman-Sachs(Oktober 2009)

Elsenhans, Hartmut. 2005. "Staatsklasse und Entwicklung revisited." Ulf Engel et al(Hrsg.). *Navigieren in der Weltgesellschaft. Festschrift für Rainer Tetzlaff*. LIT, S. 155~167

______. 2001. *Das Internationale System zwischen Zivilgesellschaft und Rente*. LIT.

______. 1998. "Aufstieg und Niedergang des realen Sozialismus. Einige politö konomische." COMPARATIV. *Leipziger Beiträge zur Universalgeschichte und*

vergleichenden Gesellschaftsforschung, Heft 1, S. 122~132.

_____. 1997. "staatsklassen." Manfred Schulz(Hrsg.). *Entwicklung: Die Perspektive der Entwicklungssoziologie*. Westdeutscher Verlag, S. 161~185.

_____. 1996. State, Class and Development. Radiant.

_____. 1983. "Rising Mass Incomes as a Condition of Capitalist Growth: Implications for the World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1, S. 1~8

_____. 1981. *Abhängiger Kapitalismus oder bürokratische Entwicklungsgesellschaft*. Campus.

Furet, Francois. 1996. *Das Ende der Illusion. Der Kommunismus im 20. Jahrhundert*. Piper.

Gauck, Joachim. 1998. "Vom schwierigen Umgang mit der Wahrnehmung." Stéphane Courtois et al., *Schwarzbuch des Kommunismus. Unterdrückung, Verbrechen und Terror*. Piper, S. 885~894.

Gauck, Joachim and Ehrhart Neubert. 1998. "Politische Verbrechen in der DDR." Stéphane Courtois et al. *Schwarzbuch des Kommunismus. Unterdrückung, Verbrechen und Terror*. Piper, S. 829~884.

Gieseke, Jens. 2000. *Die hauptamtlichen Mitarbeiter der Staatssicherheit. Personalstruktur und Lebenswelt 1950~1989/90*. hristoph Links Verlag.

_____. 1999. "Die hauptamtlichen Mitarbeiter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als Elite." Peter Hübner(Hrsg.). *Eliten im Sozialismus. Beiträge zur Sozialgeschichte der DDR*. Böhlau, S. 201~240.

_____. 1999. "Die hauptamtlichen Mitarbeiter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 eine sozialistische Elite?." Stefan Hornbostel(Hrsg.). *Sozialistische Eliten. Horizontale und vertikale Differenzierungsmuster in der DDR*. Leske und Budrich. S, 125~145.

Hofmann, Michael. 2009. "Lebensweltliche Veränderungen der ostdeuschen Machteliten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Koreanische Deutsche Gesellchaft für Soziologie(Hrsg.). Veränderungen im sozialen Status der ostdeutschen Eliten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Beiträge zur internationalen Konferenz*. Seoul, S. 133~145.

Jeon, Tae Kook. 2009. "Veränderungen in der Auffassung der Südkoreaner zur Wiedervereinigung und die Rolle der Machteliten." Koreanische Deutsche

Gesellchaft für Soziologie(Hrsg.). *Veränderungen im sozialen Status der ostdeutschen Eliten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Beiträge zur internationalen Konferenz*. Seoul, S. 97~121.

Kabus, Sylvia. 1990. "Brief und Siegel. Die Besetzung des Stasi-Gebäudes." Thomas Blanke and Rainer Erd(Hrsg.). *DDR. Ein Staat vergeht*. Fischer, S. 79~83.

Keller, Dietmar. 1995. "Die Machthierarchie der SED-Diktatur(Vortrag vom 22. 1. 1993)." Enquê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Materialien der Enquête-Kommission*. Nomos und Suhrkamp, Bd. II-4, S. 3013~3022.

Kim, Hong-Joo. 2002. *Demokratisierung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in der Republik Korea. Übergang zu Marktwirtschaft und marktfreundlicher Ordnungspolitik im Kampf um den demokratischen Rechtsstaat. Dissertation*. Leipzig Uni.

Kim, Sun-Hyuk. 2000.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Kloss, Oliver. 2005. "Revolutio ex nihilo? Zur methodologischen Kritik des soziologischen Modells spontaner Kooperation und zur Erklärung der Revolution von 1989 in der DDR." Heiner Timmermann(Hrsg.). *Agenda DDR-Forschung. Ergebnisse, Probleme, Kontroversen*. LIT, S. 363~379.

Knabe, Hubertus. 2009. *Honeckers Erben. Die Wahrheit über DIE LINKE*. Propyläen.

______. 2008. Die Täter sind unter uns. Über das Schönreden der SED-Diktatur. List.

Kohl, Helmut. 2009. "Fernsehansprache von Bundeskanzler Kohl am 1. Juli 1990. Archiv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Politik." http://www.kas.de/wf/de/71.4516/(September).

Kwon, Goohoon. 2009.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September 21, 2009). Commodities and Strategy Research at https://360.gs.com, http://www.scribd.com/doc/20520995/North-Korea-Goldman-Sachs(Oktober 2009).

Lafargue, Paul. 1991. *Das Recht auf Faulheit und andere Satiren*. Stadtbuch.

Lee, Hahn Been. 1997. "Korean Developement Revisited: Half a Century of Interplay of Democratic Expecta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Sang-Yong Choi(Hrsg.). *Democracy in Korea. Its Ideals and It's Realities*. Seoul Press.

Lessing, Theodor. 1925. *Nietzsche*. Ullstein. pp. 93~110.

Lüderssen, Klaus Der. 1992. *Staat geht unter: das Unrecht bleibt? Regierungskriminalität in der ehemaligen DDR*. Suhrkamp.

Marxen, Klaus. Gerhard Werle and Petra Schäfter. 2007.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Humboldt-Universität.

Müller, Albrecht. 2004. "Der abgebrochene Vereinigungsboom." *Vorwärts*(März), S. 11.

Müller, Dorothea(Hrsg.). 1998. *Ambivalenzen der Okzidentalisierung: Zugänge und Zugriffe.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http://www.focus.de/panorama/welt/nordkorea-ein-viertel-des-bip-fuermilitaerausgaben_aid_338429.html

Müller, Uwe and Grit Hartmann. 2009. *Vorwarts und Vergessen! Kader, Spitzel und Komplizen: das gefabrliche Erbe der SED Diktatur*. Rowohlt.

Mürmel, Heinz. 1985. Das Magieverständnis von Marcel Mauss. Diss. Universität Leipzig.

Nietzsche, Friedrich. 1988. *Kritische Studienausgabe*(KSA), Bd. 1, 2, 7, 11. Walter de Gruyter.

Pohlmann, Markus und Jong Hee Lee. 2010. "Strukturwandel der ostdeutschen Machtelit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ologie*. Vol. 20, No.3(Herbst 2010). Seoul, S. 159~188.

Ramstad, Evan. 2009. "Study sees gains in Korean unification. A combined North and South would create an economic powerhouse by midcentury, Goldman Sachs report says." The Wall Street Journal(September 22), p. 12. http://online.wsj.com/article/SB125353016156627479.html

Rissmann, Martin. 1995. *Kaderschulung in der Ost-CDU. Zur geistigen Formierung einer Blockpartei*. Droste.

Schiller, Friedrich. 1985.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Dritter Brief." *Über Kunst und Wirklichkeit. Schriften und Briefe zur Ästhetik*. Reclam, S. 235.

Schloms, Michael. 2000. *Devide et impera: Totalitärer Staat und humanitäre Hilfe in Nordkorea*.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Sternheim, Carl. 1965. "Das Arbeiter-ABC(1922)", Fritz Hofmann(Hrsg.). *Gesammelte Werke in sechs Bänden*. Aufbau-Verlag. Bd. 6, Vermischte Schriften, S. 278~292.

Vogler, Werner. Hans Seidel and Ulrich Kühn(Hrsg.). 1993. *Vier Jahrzehnte kirchlich theologische Ausbildung in Leipzig. Das Theologische Seminar: die Kirchliche Hochschule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Voltaire. Francous Marie Arouet. 1984. "Gleichheit." *Abbé Beichtkind Cartesianer, Philosophisches Wörterbuch*. Reclam, S. 173.

Wagner, Matthias. 1997. "Das Kadernomenklatursystem. Ausdruck der führenden Rolle der SED." Andreas Herbst(Hrsg.). *Die SED. Geschichte, Organisation, Politik. Ein Handbuch*. Dietz, S. 148~157.

Wielgohs, Jan. 2009. "Biographische Betrachtungen der politischen Eliten in Ostdeutschland um die Zeit der Wiedervereinigung." Koreanische Deutsche Gesellchaft für Soziologie(Hrsg.). *Internationale Konferenz: Veränderungen im sozialen Status der ostdeutschen Eliten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Beiträge zur internationalen Konferenz*. Seoul, S. 63~93.

Winter, Steffen. 2003. "Soli für Margot. Politiker, Professoren, Vopo-Offiziere – Die üppigen Sonderrenten der DDR-Eliten werden zur Milliardenlast für die neuen Länder – das Geld fehlt beim Aufbau Ost." *Der Spiegel*, Nr. 16.

Wulf, Herbert. 2009. "Nordkoreas Nuklearpoker." *Friedens-Forum*, 22. Jg., Heft 4, August/(September), S. 3.

Zimmermann, Hartmut. 1994. "Überlegungen zur Geschichte der Kader und der Kaderpolitik in der SBZ/DDR." Hartmut Kaelble(Hrsg.). *Sozialgeschichte der DDR*. Klett-Cotta, S. 322~356.

"Nordkorea: Ein Viertel des BIP für Militarausgaben." AP in Focus online vom 6. Oktober 2008. http://www.focus.de/panorama/welt/nordkorea-ein-viertel-des-bip-fuermilitaerausgaben_aid_338429.html

Leipziger Volkszeitung(LVZ) vom 10. Juli 2009, S. 1.

Leipziger Volkszeitung(LVZ) vom 10. Juli 2009, S. 2.

http://www.eu-china.net/web/cms/upload/pdf/materialien/hric_2008_charter_08.pdf

http://www.scribd.com/doc/30527126/2008-China-Charta-08-Deutsch